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김 은 영,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05년 9월

독일은 이미 수십 년간 출산율이 평균 1.4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응방안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저출산은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단독부양자모델'이라 불리는 독일의 가족정책은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이후에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빈약하고, 그 대신 육아휴가기간이 길며,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의 정책은 지금까지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율이 유럽에서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직업경력 단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 된다.

2002년 현 사민당이 집권한 이래 독일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란 모토 아래 자녀출산과 직업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보육여건의 향상, 부모수당을 통한 가족지원, 가족친화적인 사회인프라 구축, 가족과 직업의 균형 등을 목표로 한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들어가며

현재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신드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출산 사회란,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명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 100명이 210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현대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노동력 감소, 성장률 저하, 고령인구 부양 문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독일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수보다 적었으나 이주민으로 인해 전체 인구수는 줄지 않고 조금씩 늘었다. 앞으로 기존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35만 명의 이주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다. 2003년 현재 독일의 가임여성 100명당 출산자녀는 134명으로 앞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율이 2050년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이 단지 인구감소의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2020년이 되면 EU 내에서 청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1997년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세 미만 인구수를 초과했으며, 2004년 현재 20세 미만 인구는 전체 독일인의 21%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은 결국 경제활동인구 및 전문 인력의 감소,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 저하, 공적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보장체계의 기능 제한 등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저출산 현황

독일은 유럽에서도 특히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출생자수가 사망

3.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독일인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에이레	미국
1.29	1.29	1.30	1.34	1.71	1.71	1.75	1.76	1.89	1.98	2.07

출처: Bmfsfj(2005), Monitor Familiendemographie, Ausgabe Nr. 1, Deutschland: Kinderlos trotz Kinderwunsch?, 3쪽 재구성.

① 직업활동과 자녀양육의 조화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독지역 주민의 86%는 출산 후 부모 모두 직업활동을 지속하기 원하나 실제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은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아기 동안 직업과의 연결성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녀양육과 직업활동을 제대로 조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자녀출산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 취업 가능성이 높거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자녀출산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서독지역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선택 경향이 뚜렷한데, 이들 고학력 여성들은 특히 자녀출산과 직업생활을 병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 경력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급해야 할 점은 가족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무자녀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도 높으며 남편의 소득이 낮은 경우 출산율도 낮다. 저소득 가정의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직업생활이 중단되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면, 고학력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부담의 어려움보다는 직업 경력의 중단으로 인한 지위상승 기회의 상실과 미래 소득의 감소를 우려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저출산의 원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독일사회에서 취업과 자녀양육을 양립

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② 안정된 파트너십

독일인의 84%는 안정된 파트너십을 자녀출산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내세운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동거부부보다 자녀출산을 더 많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독일사회의 동거가족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③ 자녀의 양육 비용

독일인이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첫 아이의 출산결정과 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둘 이상의 자녀의 출산시 소득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녀출산을 원하는지의 여부와 원하는 자녀의 수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50%는 자녀를 더 출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아동친화적 사회인프라

자녀가 있는 독일인 중 독일의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도로계획, 여가활동의 여건, 주거조건 등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인들이 아동의 욕구에 대한 이해심이 적으며 아동을 방해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⑤ 미래에 대한 확신

일자리나 국가의 충분한 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사회변동기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이 이 점을 분명히 해준다. 이 현상은 동독사회의 붕괴 당시와 통일 직후의 동독지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시기에도 볼 수 있었으며, 90년대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구조적 변동을 겪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4. 저출산과 가족정책

지금까지 독일의 가족정책은 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2000년 기준으로 가족정책에 쏟은 비용만 한 해에 1500-1650억 유로에 달한다. 킬 세계경제연구소(IfW)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자녀양육비용의 1/3 정도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이지만 독일의 출산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기존 가족정책이 출산율이 높은 타 유럽국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일은 독일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럽의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속한 유형으로 '보편적 부양자모델'이 있다.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공유하면서 공보육체계를 확립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며, 육아휴가를 두되 출산

으로 인한 여성의 직업생활 단절을 막기 위해 기간을 길게 두지 않으며 육아휴가기간의 임금보전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다.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며, 특히 기혼여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출산율도 높다.

둘째는 '단독부양자 모델'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서 집에 머물고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양육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미흡하고, 그 대신 육아휴가 기간이 길며 이 기간에 국가의 소득지원은 높다. 이들 나라는 출산율도 낮고 여성취업률도 낮다.

셋째는 '수정 남성부양자모델'로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에 속한다. 이들 나라는 비교적 공보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자녀의 직접 양육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넷째는 '자유주의적 모델'로 아동양육을 사적인 일로 여기며 가족과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흡하다. 영국과 미국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 양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남녀차별

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한다.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이 비교적 높다.

다섯째는 '혼합모델'로 이태리,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가 이에 속하는데, 이들 나라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남성이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한다. 이들 나라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이 모두 낮다.

이들 유형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소득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비율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물론 각국의 유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은 통일 전 C유형에 속했으나 A와 B의 중간 형태로, 네덜란드는 90년대 초 B에서 C로 변화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이 많고 보육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는 경우 출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육아휴가기간(Elternzeit)은 3년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하며, 이 기간 중 정액으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액수나 기간면에서 볼 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육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특히 서독지역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률은 5.5%로 다른 유럽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유치원도 종일제로 운영하는 곳이 적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Schulhort)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동독지역도 통일 후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의 감소와 여성실업률 증가로 보육률이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보육률은 35%로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 장관은 "현재 서독지역의 보육실태는 다른 서구국가에 비해 20년 이상 뒤져있다"고 진단한다.

이상의 유럽 각국 가족정책과 출산율을 비교해 볼 때 결국 독일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제도의 확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긍정적 요인: 보육시설의 확충	부정적 요인: 보육시설의 부족
긍정적 요인: 높은 소득지원	A: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B: 독일(서독지역)
부정적 요인: 낮은 소득지원	C: 영국(특히 3세 미만 아동)	D: 스페인, 이탈리아(특히 3세 미만 아동)

출처: Rürup, Bert & Gruescu, Sandra(2003), Nachhaltige Familienpolitik im Interesse einer aktiven Bevölkerungsentwicklung, 8쪽.

5.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독일의 기존 가족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거의 도움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자녀양육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출산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이 인구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가족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다.

2002년 현 사민당이 집권한 이래 독일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란 모토 아래 자녀출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생태학의 기본원리로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가족과 사회에 적용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자손을 보존할 수 있는 사회만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산율이 높은 타 국가들의 긍정적인 정책들을 독일에 적용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직업과 가족에 대한 계획을 비교적 갈등 없이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육 여건의 향상

직업과 가족생활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여건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높은 보육율과 출산율, 그리고 높은 여성취업률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특히 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의 반일제 학교체계를 종일제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독일 정부는 종일제학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육성법'을 제정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육육성법은 부모가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15억 유로를 보육정책에 투자하여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정원을 23만 명 정도 더 늘려 다른 유럽국가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② 부모수당을 통한 가족지원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레나테 슈미트 장관은 현재의 육아수당을 임금대체 형태의 부모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의 육아수당은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아 자녀출산 후 부모들은 기존의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 전 소득에 연계해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었거나 적었던 사람에게는 최저 기준의 부모수당을 주게 된다. 부모수당은 소득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유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험에서 나타났으며, 남성들의 양육참여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검증되고 있다. 최대 12개월 동안 소득에 연계된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면 조기에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될 것이다. 일 자리를 수 년 동안 떠나있는 것은 직업생활에 공백을 가져오며 직업능력을 질적으로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경력과 미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휴가를 오랫동안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 1년 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된다.

③ 가족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 사회인프라에는 안전한 도로환경, 적절한 주택가격, 수요자에게 맞는 사회서비스, 편리한 대중교통,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등이 속한다. 독일 정부는 '가족을 위한 지역 연합'이라는 모토 아래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가족과 직업의 균형

남녀 모두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자녀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독일에서는 정치계, 경제계, 노동조합 등의 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가족연합(Allianz für Familie)'을 결성해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기업의 참여도와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 고무적이다.

⑤ 가족형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창출

현대사회에서는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후에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이미 자녀를 출산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기간에 자녀출산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의 확충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일과 이와 관련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일에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⑥ 파트너십과 양육능력의 강화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양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관련 단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⑦ 목표지향적인 현금 지원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많다. 앞으로의 가족대상 현금 지원은 가족빈곤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자 계획하고 있다.

6. 나가며

독일은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하면서 여성의 변화된 사회적 역할을 기존의 가족모델에 통합함

으로써 출산율과 여성취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족정책을 펴왔으나 효과가 적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가족과 직업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3단계 모델'이 강조되었는데, 첫 자녀 출산 이전까지 여성들은 직업에 종사하다가 자녀출산 이후부터 유아기까지 직업 활동을 중단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전념하며, 그 이후에 다시 직업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모델에 따라 독일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하기위해 3년간의 비교적 긴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정책의 소득 지원(육아수당)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적 보육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단계 모델의 이론과는 달리 육아휴가 동안 집에 머문 독일 여성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실패하거나 직장생활에 완전히 통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육아휴가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이 서독지역의 경우 5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독일 사회에서 직업과 자녀양육을 조화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여성들의 경험은 직업경력을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비록 때늦은 감이 있으나 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독일과 타 유럽국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저출산과 여성취업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저출산과 여성취업이 반드시 대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정책의 내용에 따라 출산율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여성취업률을 높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가제도를 실시하되 지나치게 긴 것보다는 직장 복귀와 적응을 위해 적절한 시간으로 줄이며, 육아휴가와 관련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성도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육아휴가기간에 출산 전 소득과 연계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소득 여성의 출산유인 효과와 남성의 육아휴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5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